

건설소식



중소기업 하도급 분쟁 조정 큰 폭 증가세

올들어 원자재값 상승 한 몫

중소기업 하도급 분쟁조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형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평균 33건에 불과했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006년 73건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85건, 올해 10월 현재 75건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중기중앙회는 제조·수리·용역 부문에서 하도급 분쟁을 조정하는데, 제조와 수리는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사건을 담당한다.

통상적으로 분쟁조정 유형은 거의 대부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지만 올해 들어 비(非) 대금 미지급 유형이 11건에 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와의 거래 단절을 감수하고서 신청하는 것인데 올해 들어 특히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분쟁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고성 사망재해 가파른 증가세

9월까지 442명, 249명이 추락사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재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3대 다발재해를 집중 관리하고 있음에도 추락과 전도, 협착재해가 오히려 늘어나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부가 발표한 9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057명이며 이는 작년에 비해 4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설업은 44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1.8%를 차지했다. 건설업 사망자 가운데 249명이 추락으로 변을 당했다.

전체 산업의 사고성 재해자 수는 모두 6만3,511명이며, 이 중 1만4,215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지난 9월 건설업 재해율은 0.45%로 작년 0.46%에 비해 0.01%p 개선됐지만 사망만인율은 1.39명으로 작년 9월 말 현재 1.37명보다 다소 높아졌다.

제조업의 재해율은 0.76%로 건설업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사망만인율은 0.92명으로 건설업보다 낮았다.

재해 형태별로는 전도가 1만3,983명, 협착이 1만1,866명, 추락이 9,840명, 충돌 8,195명 순이며, 사망자는 추락이 346명, 교통사고 190명, 협착 95명, 낙하·비래 64명, 전도 61명 등이다.

특히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전도, 협착, 추락재해를 3대 다발재해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재해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3대 재해 증가율은 전도가 전년 9월 대비 18.6%, 추락이 16.0%, 협착이 0.5%였다. 추락재해에 따른 사망자도 작년 9월 311명에서 11.3% 증가했으며 전도는 작년 43명에서 41.9%나 늘었다. 협착만이 작년 113명에서 15.9% 줄었다.

전체 9,893곳의 사업장에 81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감독 역시 재해자 40

명, 사망자 2명을 줄이는 데 그쳤다.

사업자 유해요인을 줄이는 클린사업의 경우 재해자는 47.4%가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100%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사업 역시 재해자 18.5% 증가라는 성적을 남겼다.

건축물대장에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아파트 공시가격도 공개

12월부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공시가격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계건축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건설업계의 에너지절감 설계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부터 적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축물 대장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에너지효율인증 등급,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점수 등의 정보가 담겨 일반인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토부는 건축물별 에너지효율과 공시가격이 공개됨에 따라 건축물 거래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업계의 입장에서도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에 따라 공급주택 및 건축물 가치가 달라지므로 에너지절감 설계, 공시가격 인하의 유인이 커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1개 면당 500원인 건축물 대장 교부 수수료를 기본료 500원에 1면당 100원씩 추가하는 형태로 절감하는 조항도 담겼다.

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대장을 발급받을 때에는 발급장수에 관계없이 500원만 내면 되므로 주택소비는 물론 건설업계의 부담도 감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



건설용어 한마디

주택건설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주택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기명식 보증사채. 아파트값의 일부를 미리 내고 사채를 매입, 만기가 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채의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대개 1년 6개월에서 2년을 기한으로 발행된다. 아파트의 일반청약 때와 같이 청약예금 가입자만이 사채를 매입

주택상환사채

할 수 있다. 발행 가구수는 총분양 가구수의 50%로 제한되며, 발행가격은 예상 분양가의 60% 이하로만 발행 가능하며 신도시 건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여유 자금이 있는 계층이 아니면 혜택을 볼 수 없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